

##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제 정 2021.05.20

### 제 1조 제정목적

이 정책은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이 당사 내부통제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바탕으로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사안을 관리하고자 수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사안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세부적인 방안을 규정합니다.

### 제 2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제외 정보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정보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한다.

1. 자본시장법 제 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제1항 2호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는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 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통제 담당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③ 제1항 3호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 운용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 운용 관련 정보 중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임직원은 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 제 3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① 회사는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경영·부수업무, 구체적인 업무특성/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업무에 대해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으로 설정한다.

1. 경영총괄 제외 운용부문 (집합투자재산/일임/투자자문/기타 투자기구)
2. 고유투자부서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라 정의한다.

1. 경영총괄 제외 운용부문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자문)재산 및 기타투자기구(PFV 및 SPC포함)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고유운용부서 : 고유재산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제 4조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거래주의 목록
  - 가. 채권 · 채무자 등으로 참여 관여하는 경우
  - 나. 공개되지 않은 거래 또는 딜에 회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자문을 하기로 한 경우
  - 라.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2. 거래제한 목록
  - 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5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①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정보교류통제책임자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

- 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4.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율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5.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 ②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의 특정증권등(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5.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중단, 고객에 해당사실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 승인 및 사후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점검
  2. 사무공간 분리, 회의록 작성, 전산시스템 등 정보교류 차단 장치 설치 및 운영
  3. 이해상충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에 대한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4.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제 6조 예외적 교류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 · 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최소보존기간(5년) 이상 유지, 관리할 것
-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으로 기한을 정한 편입
- ③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의 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 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대표이사
  2. 준법감시인
  3.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임원
-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 발생소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기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과의 상시 정보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7조 계열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제한

-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무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 등 관련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제6조는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 8조 임직원 겸직

-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조 2항 3호,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21.05.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